

문화전당~ 금남로공원~ 광주천 1.3km

‘민주화 물길’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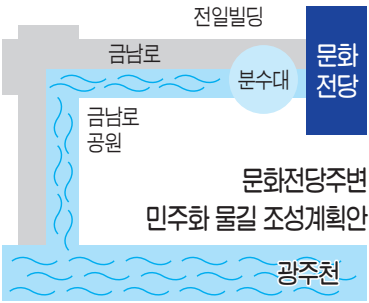
광주 구도심 교통체계

40년만에 크게 바뀔 듯

옛 전남도청 및 그 주변에 들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금남로, 중앙로를 거쳐 광주천으로 흐르는 ‘민주화 물길’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물길이 생기면 금남로 1~3가, 중앙로~광주천 구간의 차도 축소 및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광주 구도심 일대의 교통체계가 금남로가 확장된 지난 1970년 이후 40년 만에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7일 ‘저탄소 녹색성장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광개발전략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팀은 녹색성장형 선도사업으로 ‘전당 주변 민주화 물길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제안된 물길의 규모는 전당 입구~금남로~중앙로~광주천까지 총 길이 1.3km에 폭 1m 미만, 깊이 30cm 미만이



지만, 추후 논의과정에서 그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높다.

이 사업에 대해 추진단은 그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용역팀에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물길을 조성하기 위해 금남로 일대에 분출되는 풍부한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광주 시민의 메시지와 희망을 광장 바닥에 새겨 미래세대에게 문화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주·인권·평화도시인 광주의 정체성과 이미지 반영, 광주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전당 조성, 친환경적인 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 광주천, 구도심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민주화 물길사업은 이 같은 방안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주 구도심에 물길을 설치하기 전 과거 광주읍성의 해자나 조탄보, 석서정 등 옛 물길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사업의 역사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주화 물길사업 이외에도 ‘아시아인 솔라 데카슬론(Asian Solar Decathlon) 프로젝트’도 발표됐다. 이는 전당 주변의 건축물을 신·개축할 경우 태양에너지 및 친환경 소재 및 재질을 이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외의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추진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속한 건립과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협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천 무지개

지난 28일 오후 6시에 담양군 창평면 담양천 일대에 시간당 22.5mm의 폭우가 내리다 잠시 멈추면서 선명한 빛깔의 무지개가 나타났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광주·전남 곳곳에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담양=내명주기자 mjna@

무주택·1주택자 DTI 규제 한시적 폐지

8·29부동산대책…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비특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폐지된다.

보급자리주택은 예정대로 공급하되 사전예약 물량이 축소되고 시기도 약간 늦춰지며 보급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현행 25%)도 상향조정된다.

〈관련기사 5면〉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각각 2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당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8·29대책은 우선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계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등록세율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보급자리주택이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건설하되 4차 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4·23대책을 보완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입주예정자의 소유 주택도 포함하고 85㎡ 이하는 유지하되 6억원 이하였던 금액 제한은 없었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 주택의 매입조건을 완화해 공정률은 50%에서 30%로, 업체당 매입한도는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태호 사퇴

신재민·이재훈 후보자도

후임 총리 김황식 등 거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국민의 정부의 장상, 장대한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며, 청문회를 마친 후 인준표결 전에 사퇴한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또한,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자진사퇴했다.

〈관련기사 3·4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개인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총리직에 임명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7일 밤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만나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 문화장관, 이 지경장관 내정자의 사퇴도 불가피하다는 당내의 여론을 전달받고 고심 끝에 이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등의 사의와 관련, “개각 내용에 대해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 이번에 내정자들의 사퇴 의사 발표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총리 후보자와 문화, 지경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했으며 추석 이전인 내달 중순 전에는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후임 총리 후보자로는 호남 출신인 김황식 감사원장장 김덕룡 대통령 정치특보, 강재섭 전 한라당 대표, 김진선 전 강원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후보에는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과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소설가 이문열씨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조환익 코트라 사장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